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인권위는 12월 12일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권위 정책권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미가입한 유엔의 주요 인권조약인 ‘강제실종협약’에 대한 가입을 촉구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서창록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강제실종협약 관련 현황과 한국의 협약 비준을 위한 검토사항 등을 논의했다.

인권위는 한국이 미가입한 주요 유엔인권조약인 ‘강제실종협약’에 대해 2008년 2월 가입을 권고하고, 2017년 12월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을 재차 권고한 바 있다. 2018년 5월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협약가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18년 8월 권칠승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2019년 10월 박정 의원 등 13인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재구성 일정, 유엔강제실종협약에 대한 우리사회의 낮은 인지도, 관련 논의 및 연구 부족으로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의 강제실종협약 가입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협약에 가입한다면 강제실종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며,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서울사무소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입 검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조시현 연구위원은 민법과 형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강제실종협약을 포함한 국제인권협약을 손쉽게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법률을 강제실종협약의 국내이행법률로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형사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강제실종협약’ 발표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과 유엔 강제실종협약을 비교 발표했다. 강제실종협약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이지 않더라도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법무부의 강제실종협약 가입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협약 가입을 위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무부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권 NGO 소식	유엔 소식
<p>휴먼라이츠워치,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인권소식 소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016년 6월 30일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초법적 살해 (extrajudicial killings)로 도시거주 빈민들을 포함한 1만2천여 명의 필리핀인들이 사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성매매 처벌조항 폐지해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체포, 구금, 경찰의 괴롭힘, 학대 등에 노출되어 있다. 성매매 처벌조항이 폐지해야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를 최대한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 필리핀의 성소수자 학생 차별: 필리핀의 성소수자 학생들은 괴롭힘, 차별, 성소수자 관련 정보의 제한, 신체폭력, 성폭력 등을 겪고 있다. 로힝야족의 위기: 2017년 8월 이후 74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이슬람교도들이 미얀마 군부의 인종청소작전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대피했다. 미얀마 보안군은 대량학살, 성폭력, 방화 등 반인도범죄를 저질러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차별: 사우디아라비아의 억압적인 남성후견인제도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최근 후견인제도의 잔인한 제약을 일부 폐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부분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성소수자 차별: 미국 연방법은 고용, 주거,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성적 지향,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 않고, 해고, 퇴거, 서비스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중국과 인도의 성비불균형: 전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두 개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비감별에 따른 낙태로 출생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20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인근국가의 여성들이 인신매매,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 신장지역 경찰 대규모 감시 앱 사용: 중국 신장지역의 경찰이 대규모 감시 앱을 사용하여 1천3백만 명의 위구르, 튀르크 이슬람교도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다. 파키스탄 여학생들의 제한된 교육기회: 파키스탄의 부실한 교육제도로 인해 여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나이지리아 여성 인신매매: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성착취, 노동착취의 피해를 입고, 나이지리아 이주여성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사례가 보도되었다. http://dailybrief.hrw.org/embed/2547 	<p>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폴란드 사법개혁에 우려표시</p> <p>루버트 콜빌 (Rupert Colville)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에서 폴란드의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p> <p>콜빌 대변인은 12월 12일 폴란드 의회에 제출된 법안의 초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당이 제안한 일부 개정사항이 초안에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우려를 해소시킬만한 수준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p> <p>대변인은 폴란드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유엔 인권 이사회의 신규회원국으로서 높은 수준의 국제인권법준수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권력분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조치는 즉각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p> <p>폴란드의 극우정당인 법과정의당 (Law and Justice Party)은 2015년 말 집권여당이 되면서 부패와 공산주의 사상이 만연한 사법부의 개혁을 선언했으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p> <p>개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의 은퇴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폴란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임기를 5년 연장한다. 일반법원의 판사 및 검사 은퇴연령을 현재 67세에서 여성은 60세, 남성은 65세로 낮추고, 집권여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판사의 임기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압력을 받고 개혁안이 일부 수정되었지만, 개정된 내용 역시 성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사법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p> <p>또한 판사가 판결과 관련하여 조사,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의회에서 지목한 판사가 징계 청문회와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로서 유럽 내 여러 국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p> <p>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447&LangID=E http://www.dw.com/en/what-are-polands-controversial-judicial-reforms/a-51121696</p>

기획특집

행사일정

APF 회원기구들의 2018-2019 주요사업- 필리핀, 스리랑카 국가인권기구

2019년 9월 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연례회의에서 각 회원기구들은 2018-2019년도의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는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초법적 살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사례를 감시, 조사했다. 또한 소외된 계층에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 단체들과 협력하여 수감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문화, 예술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사무소를 신설, 대변인을 임명했다.

필리핀국가인권위원회는 초법적 살인의 조사과정에서 안보당국의 소극적 협력과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영역 제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위원회 내부의 사건 조사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사례를 축적하고 필리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 업무에 인권원칙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스리랑카국가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ssion of Sri Lanka)는 2018-2019년도에 올해 4월 21일에 발생한 부활절 폭탄테러에 대한 대응과 청년 인권의식 제고 캠페인에 집중했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3개의 교회와 3개의 호텔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감행하여 259명의 사망자와 5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스리랑카국가인권위원회는 보복성 폭력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 보상을 지원했다. 혐오표현의 위험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캠페인을 전개해서 민주주의, 다양성, 다원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했다.

정치적 분열이나 만연한 혐오표현, 안보중심의 해결책 모색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함을 발견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면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http://www.asiapacificforum.net/resources/>

2020년 1월 유엔 주요회의 일정

날짜	회의
1/14	인권이사회 인권정례검토 트로이카 선정회의
1/20-1/31	인권정례검토 실무그룹 제35차 회기
1/20-2/7	아동권리위원회 제83차 회기
1/27-1/31	법률직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제27차 회기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